

세상은 바뀌기 마련이다!

글 | 김갑수 _ 문화평론가 dylan@unitel.co.kr

해가 바뀌고 생일도 지났으니 이제 선 살이다. 어감이 좋지 않다. 선밥이 연상되고 신 시금치가 떠오른다. 오십이라고 말한들 나올까. 19세기에 작성된 노이루피네르 그림집에 ‘인간의 나이 계단’이라는 게 있다. ‘열 살은 아이, 스무 살은 젊은이, 서른 살은 성인, 마흔은 그러저럭 지내다가, 쉰에 늙어가기 시작하여, 예순에는 그렇게 계속되고, 일흔에는 노인이며, 여든에는 호호백발이요, 아흔에는 아이들 놀림거리, 백에는 하느님의 은총.’

쉰에 늙어가기 시작한다는 말이 맞다. 적응하기 힘든 대상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다. 늦장가 들어 이제 중학교 2학년생이 된 아들 녀석이 내 늙음을 가장 크게 일깨워 준다. 나는 녀석이 열광하는 ‘프라모델’이며 ‘캐릭터’ 따위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다. 아이팟을 끼고 사는 녀석이 즐기는 랩송에서 ‘음악’ 을 느낄 수가 없다. 아, 며칠 전 녀석이 묻던 말이 떠오른다. “아빠, 고통 없이 뭔가가 될 수는 없어?” 뭘 소리나는 반문에 녀석은 사뭇 진지하게 말한다. “내가 읽은 어떤 책에서도 뭔가가 된 사람은 다 고통을 ‘되게’ 겪었더라고. 근데 난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

당혹스러운 정부부처 감축 · 교육정책 · 대북정책

중학생 아들과의 세대차이야 그러저럭 세월 탓으로 돌리겠는데 요즘은 새로 들어선 정부의 각종 정책방향에서 당혹과 부적응을 느낀다. 미리 말해 두지만, 나는 만들어서 앞으로 가면 뒤에 난 게 길이라고 믿는 편이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가야만 하는 최선의 길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길을 ‘잘’ 가면 된다고 생각

하는 결과 추수주의자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 남미식 악성 인플레이션의 목전에서 3% 저속성장으로 경제기반을 구축한 전두환도 긍정하고, 군 권력이 민간에게 넘어가는 동안 총을 쓰지 않고 연착륙을 가능하게 만든 노태우의 업적도 긍정하게 된다. 박정희를 출발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좀 시끄럽기는 했지만 무척 잘해왔다고 믿는 것이다.

온 국민이 다 미워하는 듯이 보였던 노무현, 그리고 그 이전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나는 진심어린 상찬을 하고 싶다. 돈을 주고 샀건 질질 끌려 다녔건 남북간에 조성된 화해와 교류의 큰 방향은 대세를 제대로 읽은 것이다. 극단적인 경제 양극화의 진행을 그나마 제어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워 놓은 것도 노무현의 최고집덕택이라고 나는 믿는다. 아, 김영삼을 빼놓았다. 마치 무능의 대명사처럼 우리는 그를 기억하지만 사실 그 시기에 시행된 금융실명제 덕택에 지금 정도라도 사회 투명성이 확보된 것이다. 언론에 등장하는 부정부패 사건에서 금액의 단위가 한 자리, 심지어 두 자릿수까지 줄어든 것은 분명히 실명제 덕이다.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청와대 인사의 뇌물 수수액이 30억 원도, 3억 원도 아닌 3천만 원이 었지 않았던가.

이렇게 대세추종적이고 결과추수적인 태도라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새 대통령 MB에게도 박수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마땅하다. 앞뒤 재지 말고 무조건 박수부터 치고 볼까나?

그런데 그게 참... 먼저 선거시 공약사항인 한반도 대운하 앞에서 손이 얼어붙는다. 너무도 미주알고주알 문제점이 다 파헤쳐져서

새삼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서민가계 쪽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필요한 속사정은 이해하겠지만 그 많은 합리적 과학적 반론을 무릅쓰고 꼭 추진을 해야만 옳은가.

야당과 엮치락뒤치락 공방을 거듭한 정부부처 감축안도 그렇다. MB의 기업운영 체험으로 보자면 효율성만큼 생산성에 보탬이 되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기업내 모든 부서는 언제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울상을 짓는다. 하지만 10명이 하던 일을 5명으로 줄여놓아도 일은 굴러갈 뿐더러 오히려 더 능률적인 경우도 많다. 작고 효율적인 조직은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초일 수 있다. 그런데 이걸 기업이 아닌 나라일이다. 국가행정이 이윤창출을 위한 일일 것인가. 큰 정부 작은 정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레이건 행정부나 대처내각이 지향했던 감세와 작은 정부론이 지금 우리 현실과 등가일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 나라는 인구대비 행정 인력이 매우 적은 나라에 속한다. 나는 아주 소박한 의문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경제규모를 이만큼이라도 키워놓았다면 국가의 행정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이 아닐까. 가령 개인의 몫으로 던져진 육아며 교육, 의료 따위는 국가가 책임져 주어야 할 사항이 아닐까. 그리고 그에 따른 재원은 정정당당하게 증세를 통해 실현하겠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지.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복잡한 감회를 느낀다. 박정희 정권기였던 1974년, 민관식 문교부 장관에 의해 시행된 평준화 교육안이 기초부터 뒤바뀌려 하고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평준화의 확실성에 대해서 넋더리를 내는 게 사실이다. 괴멸에 가까운 공교육 현실 앞에서는 무언가 손을 대도 대야 할 때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20여년간의 평준화 시책으로 국민의 지적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엘리트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평준화의 문제점을 탓하느라 그것이 갖고 있던 긍정적 기여가 지나치게 도외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출신학교로 평생의 서열구조가 만들어지는 우리 풍토에서 청소년기부터 능력별로 따로 어울리게 만드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지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비핵, 개방, 3000’ 이것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요약한 슬로건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하면 10년 내에 국민소득 3천 달러를 만들어주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이다. 비판자들은 묻는다. 대체 무슨 수로 남의 나라 경제수준을 10년 안에 7배나 올려주겠다는 것인가. 나는 이 3천 달러라는 수치에 집착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만한 의욕의 표현이라고 보면 될 테니까. 하지만 핵을 포기시키고 전면적인 개방을 유도하는데 새 정부가 말하는 ‘포괄적 상호

주의’가 과연 유효한 접근법이 될 수 있을까. 너네가 성의를 보이는 만큼만 지원하겠다는 것이 상호주의의 의미인데 도저히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 없는 북한과 합리적인 주고받기가 가능한 것일까. 차라리 이전 정권의 좀 무식한 ‘퍼주기’ 식 구애가 현실적으로 그네들을 움직이는 수단은 아닐까.

경험한 성과만 고집하는 태도도 노인성치매(?) 전조

이 정도만 하자. 여기까지 언급한 것만으로도 나는 상당한 반MB로 낙인찍힐 것 같다.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다. 앞에서 나이를 거론하고 늙음을 탄식한 바로 그것과 결부된다. 내과의사인 아내가 하는 말이 치매의 첫 번째 단계가 옹고집이라고 한다. 보통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만을 치매증상으로 알지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입장만 완강하게 고집하는 태도가 노인성 치매의 초기단계라는 것이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이전에 경험한 성과만을 고집하며 반박논리를 세우는 내 태도가 바로 노인성 치매의 전조가 아닌가 싶다는 말이다. 나는 80년대에 형성된 세계관으로 지난 두 정권기의 시책에 적응했다. 복지지향적, 평화주의적 방향이 옳다고 수긍해왔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다수의 사람이 그와는 다른 방향의 선택을 했다. 그것에는 마치 사람의 팔자와도 같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내적 필연이 개재돼 있을 것이다. 만일 MB의 집권 기간 내내 ‘아, 옛날이여!’를 노래하며 지낸다면 내 늙어가는 인생이 고달프고 서러울 게 틀림없다. 그러니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옳다고 믿고 있던 행정규모, 교육정책, 대북정책 등이 반드시 최선인지, 다른 선택이 줄 수 있는 가능성과 장점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평생토록 현실정치의 근처에 가본 일도 없고 그럴 의향도 추호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에 대한 지나친 관심 자체를 버리는 일도 필요한 일은 아닐까. 행복한 노화, 그걸 위해서 말이다. ㉮



글쓴이는 시인이자 문화평론가로서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KBS 라디오 독서실 진행과 ‘TV, 책을 말하다’의 자문위원, 고정패널을 겸하고 있다. 시사칼럼집 『나는 왜 나야야만 할까』, 서평집 『나의 레종 데뜨르』, 음악칼럼집 『텔레만을 듣는 새벽에』 등을 출간했다.